■ 100일 남은 F1, 전남도 준비상황

# 공정률 82% 경주장 건설 순조

영암에서 열리는 F1(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오는 16일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온다. 전남도와 F1대회조직위원회는 세계 3대 스포츠의 하나이지 모터스포츠의 꽃으로 꼽히는 이번 첫 F1 대회의 성공 개최 여부가 향후 7년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경주장 건설 및 교통·숙박 대책을 점검하는 등 총력을 쏟고 있다.

오는 10월22일~24일 열리는 대회의 준비상황과 분야별 대책을 살펴본다.

◇경주장 건설현황=전남도는 8월 말까지 F1 경기장 건설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군 삼호읍에 들어서는 경주장의 현 공정률은 82%. 직선구간(1.19㎞)을 포함한 경주장 트랙(5.596㎞)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랜드 스탠드(1만6000석)의 경우 관람 의자 부착 공사만 남아 있으며 피트·패독도 내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주장으로 연결되는 지방도 810호선 확·포장 공사는 80%의 공정률로 7월 말 준공 예정이고, 국지도 49호선에서 경주장으로 진입하는 교차로 공사도 9월 준공을 목표로 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교통·숙박 대책=전남도와 F1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기간 중 23만2400여 명의 관람객이 몰리면서 6만5000대의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직위는 특히 수도권·광주 방면에서 몰리는 관람객들을 분산시키기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등 교통난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복안이다.

우선, 경주장 인근 23개소에 4만1920대의 환승주차장을 마련하고 600대의 셔틀버스를 활용, 경주장으로 진입하는 교통대책을 수립해놓았다.

김포~무안간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과 KTX 임시열차를 편성하고 무안군 일로역에서 영암군 대불역까지 셔틀열차를 운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거북선유람선(2척) 등을 활용한 해상운송 계획도 세워놓았다.

또 대회기간 방문할 관광객들의 경주장 및 인근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나비와 맵피 등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와 연계, F1대회 안내코너를 별도로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다. 이 코너에서는 경주장까지 진입로를 비롯해 간선도로는 물론 목적지까지의 이동거리, 예정 소요시간, 주요 경유지, 막히는 길과 우회도로, 골목길까지 다양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10월 22일부터 사흘간 영암에서 열릴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 건설현장. 현재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랜드 스탠드 및 경주장 트랙 공사가 한창이다.

## 4만여대 환승주차장 마련 교통 분산

## 기업체 등 티켓 대량구매 지속 문의

대회관계자들을 위한 숙소가 모텔인 경우에는 통역이 가능한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자를 배치, 호텔 수준의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루 최대 6만3000여명에 이르는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숙박 대책도 수립했다. 광주·전남에서 8만명이 수용 가능한 3만8870실을 홈페이지의 숙박정보 안내시스템과 연계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오토캠핑장(20~30대)을 비롯, 텐트촌(200~300동)을 활용하고 한옥빌리지(236실), 홈스테이(200가구), 템플스테이(8개 사찰) 등 남도 체험형 숙박시설도 운영한다.

◇홍보·관광객 유치 마케팅=전남도는 이번 대회가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세워놓고 있다.

D-100인 16일부터 18일까지 광주·전남과 수도권 일대에서 대회 개최 분위기를 띄우는 카퍼레이드와 드래그 레이스 가 펼쳐지고, 대회기간 1주일을 'F1 위크'로 정해 경주장 인근에서 사물놀이와 뮤지컬, 난타,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 기간에는 광고탑과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물을 활용,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관람객을 위한 이벤트와 마트 할인 행사 등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또 결승 레이스 전날인 토요일에는 관람객을 위한 체험문화행사를 마련하는 한편, 호주 대회의 운영 방식을 활용해 관람객에게 우승자 시상대인 '포디움'을 개방키로 했다. 이럴 경우 관람객들이 우승한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한국관광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20개 해외지사망을 활용해 2500여명의 해외 관광객을 모집하는 한편 대회기간 중 지역 관광지를 둘러보는 상품을 마련,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티켓 판매 및 스폰서십 유치=F1 한국대회 운영법인인 KAVO 관계자는 "다양한 판매정책으로 인해 공식적인 입장권 판매 현황이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KAVO측은 "지난 3월 서울에서 티켓 발매 행사 '그랜드 오픈 페스타'에 참여한 기업들만 70곳에 달한다"면서 "이들 기업의 60% 이상이 지속적으로 스폰서십 및 티켓 대량구매 등에 대해 문의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작년 전남 지방채 70% 증가

## "성남시 사태 남의 일 아니다"

경기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지급유예 선언을 한 가운데 200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가 7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조사되는 등 지자체의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3일 '지자체 재정난 원인과 대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2009년 지자체 통합재정수지에서 7조1000억원 적자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증가 지출에 대한 조정과 세입여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지자체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합재정수지는 매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각 지자체의 재무안정성과 건전성을 파악하는 수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분석결과 여수시가 34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목포시가 164억원, 장흥군이 39억원의 적자규모를 각각 나타냈다.

지방채도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2009년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1조2262억원으로, 1년전인 2008년말의 7242억원에 비해 무려 69.3%가 증가했다.

반면 광주는 2008년말 8235억원에서 2009년에는 8098억원으로 1.7% 감소했다.

올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자체적으로 조달가능한 재원 비중)는 광주가 47.5%로, 2009년의 48.3%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 등 50%를 넘지 못했다. 전남 역시 2009년 19.4%에서 2010년 20.6%로 소폭 상승했지만 22개 시·군 가운데 고흥이 8.6%, 곡성 8.7%, 보성 8.9%, 강진·장흥 9.2%, 완도 9.5%, 함평 10.3%, 장성·무안 10.7%를 기록하는 등 대다수 시·군이 10%대 안팎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면서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55.7%인 137개에 달했다. 광주에서는 동구, 전남에서는 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함평·장성·완도 등 9곳이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포함됐다.

예산정책처는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위기 대응지출 증가, 사회복지지출 증가, 국세감세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 청사 신·증축 비용, 행사·축제 경비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2005년 이후 청사를 신축한 성남시 등 13개 지자체의 총사업비는 1조4234억원(평균 사업비 1095억원)이었다. 성남시청 사업비가 32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북도청(1692억원), 전남도청(1667억원) 사업비의 2배에 달했다.

또 12개 신축청사의 유지관리 예산은 260억2293억원으로 신청사 입주직전 유지관리예산(79억6111만원)에 비해 226.9% 순증, 청사신축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지방재정 비상…'위기경보시스템' 구축

## 행안부, 한도 설정 지방채 발행 엄격한 규제

12일 경기도 성남시의 '지급 유예' 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막고자 '지방재정 사전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 설정을 엄격히 하고 잉여금의 지방채 변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13일 "지방의 재정 여건을 점검해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실태를 파악하고 경영을 개선하도록 하고자 지방재정 사전 위기정보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의 재정 정보를 전산화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연계해 행안부가 지방의 세입과 지출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재정 상황이 위험 수준에 이른 지자체를 진단하고 교부세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연내 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채 발행 상한을 정하는 지표에 미래위험 요인을 반영하고 감채기금 적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는 행안부가 설정해 준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한도를 넘겨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채무를 많이 상환한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 한도가 낮아지고 채무를 적게 상환한 지자체는 한도가 높아지는 것은 모순이며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 규모가 감안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채무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과거 상환실적에다 미래의 채무상환액 규모도 산입해 미래 위험도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채무가 많은 지자체는 그만큼 지방채를 적게 발행하게 된다.

/연합뉴스